



국정감사, '민선8기 유정복 號' 방대한 인천현안 설명



인천시 19일 국감, 의원들 사업 등 현안 질의에 답변 민선7기 시 정부 때 불합리한 주민자치예산 집행 거론

2023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에서 열렸는데 1800개 넘는 현안 행정 서류들이 준비된 가운데 각종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이양 문제 등 질의가 있었다.

인천시는 2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다른 사안 등이 끝나면 경찰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마지막 순서다.

유정복 시장 임기 내 매립지 종료가 될 것인지 관심이 컸다. 유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김교홍 행안부 위원장은 인천 서구의 지역구의원 출신이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있지만 아무런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됐다. 인천 자체의 소각장 후보지도 찾지 못한 내용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전 "R2부지 매각 백지화와 더불어 K팝 시티 특혜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유정복 시

장은 대형사업은 합리적 기준부터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사업 문제가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향후 의혹 한 점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지켜봐 달라는 자신감을 내 비추고 있다.

민선7기 시 정부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남발했다는 지적은 지난 지방정부와 관련된 일로서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민선 6기 이미 4자 협의가 된 상태지만 민선 7기에서 미루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예산 집행의 수백억 폐단을 면밀하게 감사했다. 잘못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재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등 진행 사안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인천을 초인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는 확실한 의지가 분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사업들은 규정제정,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과 연계된 핵심 현안의 국토부 사업 등과 관련해서 '순산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잦점이 됐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조해 잘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가구에 대해 선제적 혜택과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한편, 유정복 호의 인천지역 발전에 대한 지속적 재결심은 도시 변화를 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상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인천광역시의 여러 현안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국힘은 창과 방패라는 목소리와 국감을 대비한 인천시의 예측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최재윤 기자

(사)자유경제실천연합, 긴급 임시총회 개최

공익법인 지정 추진...새 개편에 나선 자실련 정관개정의 건 처리...부조리·불공정 사회정화

사단법인 자유경제실천연합은 19일 연수구 소재 동국명상원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새 도약을 다짐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자실련 개편을 위해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익법인 재지정 추진과 정관개정의 건을 처리했다.

자유경제실천연합의 정관개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과 부조리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간 갈등을 해소"를 시키겠다는 목표다.

2006년 출범한 자실련은 17년 차를 맞았다. 시민단체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회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하는 조직의 확장성을 논의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구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시민



운동의 중심 행동단체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자실련의 제2 도약의 재출범으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자실련은 그동안 "OK-TV 아하! 그렇구나" 인터넷 방송과 경제포럼, 명사초청강연, 정책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대부로 알려진 하석용 인천클럽 회장은 축사에서 "자실련의 새로운 2기 출발을 축하한다"면서 "시민단체는 누구의 눈

치도 보지 않고 사회정의의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욱 자실련 회장은 "이번 임시총회 이어 금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신청, 임원개편 및 각종 위원회를 개편하여 회원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5월 창립 18주년을 계기로 새 비전선포와 재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시민단체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공공데이터, 국무총리상 수상'

운영 실태 평가 높은 점수 받아

인천광역시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에서 '2022년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맞이해, 공공데이터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인천시는 지난 6월에는 행안부로부터 2022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다.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관리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는 전국 5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는 개방·활용·품질·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사가 됐다. 인천시는 97.9점을 획득해 광역 단위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우수등급(96.34점)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시정 정책 결정의 기

반 자료로 활용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설해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열린 인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2개 팀은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행정의 재결심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란 후문이다.

손혜영 인천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인천시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시민과 기업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